

## 데스크칼럼

## 정현아

경제부장



‘싸움은 섰빵’. 권투나 태권도 등 투기종목을 좀 아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경기 시작 후술이 울리자마자 상대의 콧잔등을 먼저 한 대 세계 때려놓으면 상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덜 수밖에 없고, 결과는 보나마 나다.

이재명 정부가 확실히 선제공격을 날렸다. 지난 6월 27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최근에 본 가장 효과적이고 극적인 ‘섰빵’ 같은 선제 조치가 아니었나 싶다.

인천 앞바다 물이 모두 사이다여도 겁이 없으면 마실 수가 없다. 투자를 하면 한푼이 푹 떨어질 것처럼 보여도 막상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그 지점을 깊숙이 꿰뚫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어버렸다. 신용대출도 극단적으로 옥죈다. 일단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서 되팔아 돈을 벌어야겠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돈을 묶을 차단한 것이다. 최소한 지금까지 이 대책의 약발은 강하게 먹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임과 함께 쥐도 새도 모르게 전두환의 쿠데타에 앞장선 군 사조직 ‘하나회’를 해체하고,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해 지하금융을 양성화한 김영삼 전 대통령 때의 기억이 이번 6.27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소환됐다.

주택 한 제에는 300가지 이상의 자재 등이 연관돼 있어

## ‘섰빵’ 날리기, 그 이후

단순히 집을 짓는 산업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건설업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십 수백억원의 여윳돈을 굴리는 극상위층이 아닌 중산층 서민에게 재산목록 1호는 단연 ‘집 한 채’다. 주택이 비싼만큼 이를 취득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만만치 않다보니 정부도 이를 가버이 볼 수 없다. 수도권과 지방도시, 무주택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 신규 취득과 전환 수요, 전월세 공급 등 본디 집이라는 게 사람이 사는 데 가장 중요한 세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만큼 이해와 요구, 상호 충돌은 끝이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6.27 부동산대책의 유효기간을 대략 6개월 정도로 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2년 가까이 스멀스멀 울랐던 집값이 6억원 대출규제의 위세에 놀려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말이 지나면 다시 반등, 반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스물여섯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내놓은 대책이 석달을 버티지 못했다는 말이다. 거기에 비해 6개월을 유효기간으로 봐준다는 것은 상당히 후한 평가이거나 대책이 강력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문제는 다음 정책이다. 서울 강남이 개발된 1970년 대 이후 집을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또 돈맛을 봤던 강남 땅보유자 등 수많은 부동산 투기자들에게 6개월은 너무 가혹하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정부 정책을 뒤집거나 피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이전 보다 정교하고 과감하게 시도할 것이 뻔하다.

그에 맞서 정부가 내놔야할 정책은 단연 주택공급 확대다. 공공기관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과 2가구 이상 보유자에 세금을 무겁게 매겨 잉여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해야

한다. 구도심 재개발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대책도 거론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세컨드홈’ 세제 특례 등을 대폭 보완하는 것도 지역소멸 대책과 맞물려 고민해볼만 하다. 물론 지속적인 대출 규제도 갭 투자를 차단하는 것은 기본 전제다.

문제는 시간이다. 연관 산업이 많은 것에 비례해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4~5년, 택지조성부터 해야 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이면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현 정부 임기 5년 안에 공급을 통해 근본적으로 집값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 사이 돈맛을 아는 부동산 투기 세력과 싸워야 하고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무주택자들을 달랠야 한다. 세입자들의 형편도 살펴야 한다.

뒤따라가는 대책으로는 집값과 탐욕을 잡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가 그랬다. 이재명 정부가 우선 할 일은 누구를 위한 부동산대책인지 정책 타기부터 설정해야 한다. 무주택 서민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디폴트값이다. 이후에는 자금, 세제, 공급, 규제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끌어와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집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용이라고 생각하도록 인식을 바꾸는 작업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집을 받치는 기둥이 정권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된다는 비상한 각오와 결단. 실전을 국민은 보고 싶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도 7000여 세대로 추산되는 광주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어떻게 해소하나. 자금줄이 마른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위기관은 어떻게 잡을까. 주택문제를 중앙 정부, 서울과 수도권만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문과 걱정이 가시지를 않는다.

## 함께 누리는 새로운 미래, 더 행복한 전남

직장에서는 채용과 승진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선택을 제약하고 사회적 역량을 약화시킨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성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률과 국민행복지수도 높다고 분석했다. 성평등은 인권을 넘어 지역 발전과 지속 가능성의 핵심 과제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미래 성장전략의 키포인트로 성평등에 집중하고 있다. 스웨덴은 남성 육아휴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일상화했고, 그 결과 여성의 경력 단절이 줄고 출산율이 회복되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에서도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을 적극 지원하면서 조식문화 혁신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성평등이 곧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기조 아래 일상에서 성평등을 제강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모든 정책과 예산이 특정 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공공기관 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운영해 여성의 채용과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전남여성가족재단과 가족센터에서는 가사·돌봄 분담,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맞돌봄·맞살림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넵! NOW** 페어팩밀리’ 가족공동체 운영 사업은 가족 구성원의 가정 내 가사·돌봄 노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인식 전환을 위한 리빙랩 방식의 새로운 도전으로서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전남지역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차별 없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하고 있다.

성평등은 단순히 여성만의 과제가 아니다. 남성 역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등 전통적으로 주어진 역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성평등 사회에서는 남성도 자유롭게 돌봄을 선택하고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결국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길이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듯 전남의 성평등 정책은 전국적인 변화를 이끄는 모델이 될 것이다.

매년 9월 첫째 주는 양성평등주간이다. 그 가치를 다시 새기고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이다. 시나브로 우리의 작은 노력과 관심에서 시작된 성평등 바람이 전국에 들불처럼 퍼지면서 더 공정하고 더 행복한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 풍암저수지, 광주의 미래를 담다

또한 유지비용의 예측과 관리 제도화가 필요하다. 원형 보존 상태라면 연간 수억 원이면 충분하겠지만, 개발 이후에는 음압분수·경관조명·수경시설 운영으로 관리비가 두세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장기 운영비를 예측하고,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화려한 개장보다 꾸준한 관리가 더 큰 가치를 만든다.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도 빼놓을 수 없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배제한다면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풍암저수지의 환경 모니터링,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만이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기후적응형 관리 체계도 필수적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폭염은 호수 생태계에 직접적인 위협이다. 따라서 수온, 조류 발생, 수질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준치를 넘으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산책로,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수변데크,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은 기본이다. 공공 공간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려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사 기간이 2년에 이르는 점도 중요하다. 주민들의 불신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것처럼 3D 영상물과 가상 모델을 곳곳에 설치해 개발 후 모습을 알리고, 공정별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주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다. 신뢰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이번 비전 선포식이 있기까지 앞장서 온 강기정 광주시장의 노고와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 쉽지 않은 길들 속에서도 광주의 미래를 위해 방향을 제시한 리더십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써 온 관계자들의 땀과 헌신에도 따뜻한 격려를 전한다.

풍암저수지 개발은 수질 개선과 시민 여가 공간 확충이라는 장점을 안고 있지만, 동시에 유지비용과 생태 훼손, 주민 갈등이라는 단점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개발은 친환경·저비용·주민참여·포용성 위에 서야 한다.

이번 선포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남은 과제를 하나씩 풀어나며 진정한 ‘명품호수공원’으로 완성될 때, 풍암저수지는 광주의 자부심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갈등을 넘어, 풍암저수지가 광주의 미래를 담은 명품호수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 OPINION

2025년 9월 1일 월요일

## 사설

## 전남 소아진료 사각지대…대책마련 절실

전남 22개 시·군중 15곳이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소아진료 사각지대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없는 전국 기초자치단체(58곳)의 25%가 넘는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원급 기관 수는 지난 2018년 3만1032개소에서 올해 3만6520개소로 7년동안 5488개소(17.7%)나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2221개소에서 2187개소로 오히려 34개소가 감소했다. 증가 추세에 있는 다른 진료과목 의원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는 저출산, 낮은 수임성, 전공의들의 기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소아 청소년과 의원이 없는 전국의 지자체 대부분이 농산어촌 지역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아과 전문의 부재, 대학병원 전원 연계 미흡으로 응급·중증환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소아 청소년과 의원이 없는 지자체가 담양·함평·영광·장성·해남·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영암·원도·장흥·진도군 등 15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내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8개 필수진료과 전문의 수마저도 턱없이 부족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에도 나타나 있다.

전남은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8개 진료과 전문의 수가 0.29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3.02명)에 비해 9.6% 수준에 그쳤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는 13위로 중하위권이다.

인구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 지자체가 각종 인센티브로 출산을 장려하며 출산율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태어난 아이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조적인 의료 사각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 GGM 캐스퍼 20만대 생산, 노사갈등 과제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의 현대자동차 캐스퍼 누적 위탁 생산 20만대가 초월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예정대로 라면 오는 9월 2일께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캐스퍼 생산 5년 만이다.

2021년 9월 1일부터 양산을 시작한 캐스퍼는 출시 직후부터 국내 경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았다.

그해 1만2353대, 2022년 5만대, 2023년 4만5000대, 2024년 5만3029대, 올해 지난 28일 기준 3만8250대 등 총 19만8632대의 누적 생산량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였다.

최근에는 전기차 모델을 추가하면서 영국과 일본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등 외국 소비자들까지 사로잡고 있다.

일부 모델은 최대 22개월까지 기다리는 등 현재 출고 대기 기간만 최소 1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차는 그동안 GGM을 통해 30% 이상 낮은 직원 초임으로 생산 단가를 낮추고, 광주시는 700여개의 지역 일자리를 만들며 상생해 왔다.

GGM도 지난해 매출 1242억원과 영업이익이 299억원을 기록하는 등 자동차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보여 왔다.

문제는 GGM이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사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더 커졌다는 데 있다.

2019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결실로 출범한 GGM은 무노조·무파업 등의 합의를 담은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를 마련해 운영해 왔다. 협정서는 노사는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까지 매년 소비자들이 상생을 범위 내에서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 조건과 작업 환경은 상생협의회에서 협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노조가 출범하고 임금 협상을 둘러싼 첫 파업이 발생하는 등 노사 갈등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협정서는 사실상 파기수순에 들어갔다.

이제는 지속되는 노사충돌로 바로보는 우려의 시선도 많다. 파업과 노사갈등이 공장 가동 차질로 이어져 현대차의 신뢰를 잃거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GGM이 노사갈등을 해소해 광주형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 주필 김상훈                                                                                                                     | 편집국장 최현수                                                                                                                                       |
|-----------------------------------------------------------------------------------|----------------------------------------------------------------------------------------------------------------------------|------------------------------------------------------------------------------------------------------------------------------------------------|
| <b>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b><br>우편번호 61234<br>대표전화 (062) 370-7000<br>팩스 (062) 385-5400 | 정 치 부 370-7010<br>경 제 부 370-7020<br>사회교육부 370-7030<br>지역사회부 370-7040<br>문화체육부 370-7234<br>편 집 부 370-7082<br>사 진 부 370-7050 | 논 설 실 370-7060<br>뉴미디어부 370-7222<br>임 원 실 370-7000<br>총 무 국 370-7093<br>사 업 국 370-7090<br>광 고 국 370-7070<br>독자관리국 370-7080<br>서울지사 02-878-7090 |
| 1995년 12월 12일 창간<br>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월간)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